

이슈브리프



- 한국사회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단상
박 수 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향분석팀장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의 여성 비정규직
이 주 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부교수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 효과분석
민 무 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남성들, 그들만의 근로빈곤 문제
노 혜 진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미디어 속의 젠더 코드
김 수 아 |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사회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단상

박 수 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향분석팀장

들어가며...

고교 시절 괴짜 사회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분은 늘 입버릇처럼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만 죽이면 된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역할은 자신이 기꺼이 할 수 있노라는 극악무도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포장이 난폭해서 그렇지 참 그럴듯한 말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훗날 어떤 데서는 아이들이 굶어 죽지만 다른 곳에서는 넘치는 음식물 쓰레기를 주체 못하여 가난한 나라에 몰래 버린다는 말을 듣고 시급한 현안들이 '인구' 문제 때문만은 아니겠다 싶었다.

(눈치챘겠지만 이 글은 다소 점잖지 못한 언사와 검증되지 않은 사석의 담화들, 소소한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금은 자유로운 글쓰기 형식을 취한 것이니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인구학의 아버지라 불리기에 합당할 만큼 맬서스는 방대한 역사인구 자료 고증의 역작을 배출했고 그동안 종속변수로만 관심을 끌었던 '인구현상'을 독립변수의 위치로 격상시킨 바 있다. 그러나 훗날 그 유명한 멘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류는 산술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식량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굶어죽을 것"이라는 예언에 매몰되어 왜곡된 인구정책 전도사로 돌변하고 말았다. 맬서스는 유럽 전역을 돌며 인구증가의 대재앙에 대해 역설하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호금을 줄 경우 이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아 점점 더 가난해지므로 빈민구제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맬서스의 우려와 달리 인류는 굶어죽지 않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맬서스주의는 역사 속

에서 사라지는 듯했으나 이후 더욱 정교하고 세련되어진 신팻서스주의가 맹위를 떨치며 전세계의 인구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적정인구를 넘어서 과잉 인구는 그 나라의 가난을 초래하는 1차 주범이 되며 개발도상국들의 인구폭발을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적정' 인구는 누가 정하며 그에 기반한 '과잉' 인구는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갖는가?). 1962년 시작된 우리사회의 가족계획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뒹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경구는 출산의 경제성을 환기시켰고, 피임약의 대중화, 정부의 묵인하에 광범위하게 시행된 낙태술 등은 정책입안가들도 놀랄 만큼 우리 사회의 인구증가율을 떨어뜨렸다. 그런데 인구(억제)정책이 성공을 해도 너무 성공을 했다.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우리사회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2005년 급기야 1.08명에 이르렀다. 2004년에 들어서야 부랴부랴 정부는 오래 지속해 오던 인구억제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실기도 이런 실기는 없다. 인구현상은 말 그대로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과 같아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숫점 몇 째 자리의 변화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 온다. 인구현상이 사회 각 영역에 가시적인 파급 효과를 보일 때는 이미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쨌든 우리 사회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명을 겨우 낳는 사회가 되었다.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 보아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언젠가 우리 사회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없어 상대적 인구과잉 속에서 해매는 청년들을 볼 때 인구 감소의 위험성이 딱히 체감되지는 않지

만, 이와 같은 초저출산 현상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위기감은 온갖 매체에서 설파되고 있다. 필자도 몇 년전부터 저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회의, 토론, 발표 등을 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까 하는 얘기만 하고 들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얘기를 심각하게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은(필자를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 아이가 하나밖에 없고 저출산 문제 해결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둘째를 못 낳는다고 한다. 복지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관련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렇게 급격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그런 경향은 역전될 수 없는가?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을 둘러싸고 그 동안 필자가 느껴온 주변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하고자 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2006년 정부는 야심차게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에는 5년간 3대 분야의 242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총 예산은 32조로 기획되었다. (물론 이 [기본계획]은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중간 점검 겸 새로 단장하는 운명에 처해졌지만...) 이 기본계획 작업에 참석하면서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차마 하지 못한 말은 이것이다. 애써 작성하고 있는 242개 사업을 원래 시행하던 부처로 돌려보내고(대부분의 사업이 이미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던 것들이다) '아동수당제도(또는 양육수당제도)' 하나만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담당공무원들과 전문가

∴ 이슈브리프

들의 열기에 차마 이 말을 하지 못했다. 그때 진심 어리게 했던 많은 제안들은 ‘돈’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결국 돈이 안 드는 수많은 정책들로 기본계획은 가득차게 되었다.

저출산 관련 논의 속에 나온 몇 가지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얘기하면 그 속에 그냥 흘러 들을 수 없는 많은 진실들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의 전신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관련 작업을 할 때, 참여자들은 심하게 출산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모두 동의한 방법은 셋째아부터 무조건 서울대 보내주는 것이었다. 이 방안은 매우 효과적인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셋째부터 낳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여자들이 혼자서 애 키우고 일 하는 게 힘드니 남자들도 집에 일찍일찍 들어가게 하여 일·가정 양립, 공평한 가사분담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지금도 유효한 아이디어이며 일본의 신신엔젤플랜의 주요 관점으로 일본에서는 몇 년전 남성의 야근시 페널티를 물리는 제도를 도입했었다. 보건복지부 회의에서 6시가 되자 아름다운 음악소리와 함께 가족과 함께 하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탁 트인 사무실에서 자리를 뜨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 번은 I대 사회교육과 학생들에게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숙제로 내 준 적이 있다. 어떤 여학생은 결연하게 말한다. 자신은 결혼이나 출산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저출산 현상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니 꼭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 이상 낳겠다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대책으로 셋째아를 낳지 않은 남녀에게 피임약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이나 출산은 지극히 개

인적인 고유 영역인데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더욱이 피임약 판매 금지라니... 어떤 학생은 우리 사회에 일자리가 부족한데 노인들이 너무 많다고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있는 노인들을 굶어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사회의 다양한 일자리들을 섬세하게 위계화시켜 허드렛일부터 노인들에게 나눠줘서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여 필자를 또 한번 놀라게 했다. 저출산 관련 논의를 하면서 실망한 것은 이 학생들뿐만이 아니다. 우리사회 출산율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평등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며 신나게 얘기하던 연구자가 갑자기 독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할 때 역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독신세 신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우리사회 저출산 현상의 최대 원인은 청년층 실업에 있으므로 여성청년의 일자리를 빼앗아 남성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정교한 자료 분석에 입각하여 주장할 때는 차라리 웃음이 나왔다.

저출산 현상은 역전될 수 있는가?

인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구변천단계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주로 인구 성장의 두 요소 가운데 하나인 자연증가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출산력과 사망력을 기준으로 인구변천단계를 구분한 것이다. 다산다사 사회에서 사회·경제발전에 따라 다산소사 사회로 진입하고, 피임법의 발달 및 사회문화적 요소의 변화 등에 힘입어 소산소사 사회로 변하면서 인구변천단계는 완료된다

고 보았다. 그러나 1960년대를 지나면서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구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다. 어렵사리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최대한 아이 낳는 시점을 연기했다. 또 결혼상태에 진입한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은 이혼하는 경향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이혼을 해도 재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낮아지고 대신 동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매우 개인적이고 파편적인 현상처럼 보였지만, 점차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고 이후 미대륙을 거쳐 일본의 도시 여성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라이프스타일이 발견되었다. 레스테게(Ron Lesthaeghe) 등 인구학자들은 이 현상에 주목하여 이것을 '제2차 인구학적 변천'이라고 명명하였다. 소산소사의 단계에서 인구학적 변천을 완료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인구학자들의 예견과 달리 인구현상은 가족형성 및 개인의 생애과정의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소자녀 가치관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 사회 최초의 근대적 인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계획사업이 그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도 자연스러운 소자녀 가치관의 흐름과 순행하는 인구정책을 펼쳤기 때문일 것이다.

저출산대책을 고민하며 흔히 예를 드는 것이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사례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 국가군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무수한 사람들이 출장을 갔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우리 사회와 역사적인 배경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움직이는 구성 원리도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이다. 프랑스는

숙명의 라이벌인 독일과의 오랜 역사적 경험 속에서 무엇보다도 '인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득한 나라로서 100여년 전부터 공들여 인구(가족)정책을 시행해 온 나라이다. 몇 년 전 새로마지플랜에서 인구정책에 5년 동안 무려 32조를 쏟아부었다고 발표하던 무렵, 마침 한국 방문 중이었던 프랑스의 인구문제연구소장인 에랑(Herang)에 따르면 프랑스의 한 해 인구(가족)정책 예산은 500조가 넘었다. 그냥 이만큼의 차이이다. 또한 잘 알다시피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결혼하지 않고 낳는 자녀수가 결혼하고 낳는 자녀수보다 많은 사회이다. 벌써 40년전에 스웨덴에서는 아이를 낳은 여자들 중에서 40% 가량만이 결혼을 다음 생애사건으로 선택하였다. 절반이 넘는 여성들이 '결혼'의 형식과는 다른 파트너십을 택하였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출산과 육아는 결혼한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우선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우리 사회와 사뭇 다르다. 이런 차이를 건드리지 않고 이들 사회처럼 합계출산력 수준 1.6명 이상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도 있었다. 현실적으로 결혼관계 내에서의 출생아만 인정하는 우리사회에서 출산은 결혼을 전제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사회 출산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율을 높여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결혼연령을 낮춰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인류학에서 구분하는 '결혼사회'이기 때문이다. 취직은 필수이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 결혼을 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도무지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 누구는 취직을 못해서, 누구는 겨우 취직했는데 그만 두기가 아까워서, 누구는 독신생활이 좋아

서, 누구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마음이 짝하다!)... 우리사회 초저출산 현상의 핵심 메커니즘은 바로 이들 미혼집단의 증대, 초혼연령의 상승에 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는 불가능할까? 혼외관계라는 이유로 낙태에 의해 사라지는 아이들을 살릴 수는 없을까? 미혼모의 아이들이 해외로 팔려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까? 이 논의는 너무 앞서 간다는 이유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 '국내 입양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중화시켜 새로마지플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노력도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보다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여겨지는 일본에서도 저출산대책인 '신신엔젤플랜'의 주요 정책목표로 '성별분업 해체'가 포함되는 개가를 올린 바 있다. 놀라운 변화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거기까지 나가지는 못했다.

저출산 현상은 역전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경험상 저출산 현상은 역전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다.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저출산 현상이 아니라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현상이며 이 초저출산 현상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기형적인 결과이며 속도라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혹자가 주장하듯이 언젠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시나리오나 이러다가 노인인구와 젊은이가 서로 증오하는 위험한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더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뭔가 합계출산율 1.19명(2008년)이 오늘 여기에 사는 우리 모두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외침처럼 들

리기 때문이다. 수없이 반복되는 서베이 조사에서 사람들은 교과서처럼 이상자녀수를 2명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자녀수는 2명이 되지 못한다. 이 간극만큼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해야 출산율이 높아질까?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면 출산율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의 당면 목표는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6명이다. 반드시 그만큼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대답이 너무 허무하다. 우리 사회가 살기 좋아지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산적한 문제는 또 얼마나 많은가?

필자는 늘 저출산 문제는 빈 개념이라고 말하곤 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앞서 툭툭 던지듯이 말한 에피소드들은 우리 사회의 케케묵은 많은 관행들과 잇닿아 있다. 우리사회 초저출산 현상은 경제위기 이후 누적된, 고착된 청년 실업 문제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 취업이 남녀청년의 결혼 결정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반실업상태(혹은 비정규근로)가 결혼에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차별적 노동지위와 연관되어 있다. 그뿐인가? 청년실업률 증대가 혼인율 감소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것은 경직된 결혼문화, 사회안정망의 일천함과 연관되어 있다. 학력차별, 학벌차별 사회는 아이 낳기가 무서운 세상을 만들었다. 아무리 모성정책을 구비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은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무관하지 않다. 낙태로 사라지는 아이들, 해외로 팔려가는 아이들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혼인지위로 인한 차별의 희생물이다. 남아선호 사상이 오히려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아이러니는 무분별한 낙태와 생명경시 풍조의 만연과 연관되어 있

다. 가족공유시간을 가질 수 없는 장시간 노동시장 관행은 아무리 외쳐도 공평한 가사분담을 어렵게 만든다. 이 정도면 저출산 문제가 도대체 어떤 고유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빈 개념이다.

최근에 강남구는 둘째 출생아부터 만6세까지 보육료의 절반이나 매달 10만원(출산순위에 따라 다름)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출산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섯째아를 낳는 집의 출산 축하금은 무려 3,000만원이고 올해 한 가구가 이를 수령했다. 이런 저출산대책을 발표한 이래 강남구는 수많은 문의전화와 비난 여론에 대응하느라 분주했다. 비난의 내용은 대충 이렇다. 너희는 돈 많아서 좋겠다가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강남구같이 부자 동네에서 100만원 준다고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에게도 100만원의 지원금은 고마운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100만원은 아이를 낳는 유인 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은 지자체라도 정책결정에 따라서는 출산 장려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내 빈민가구 비율이 6위에 랭크되어 있는 구이다.

그저 빈 개념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 사회문제의 총체적인 표출이 초저출산 현상이라면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제일 쉬운 것부터 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가족가치를 복원시키고(심지어 '효'의 가치를 복원하자는 주장도 있다. 자녀를 다시 노후 보험으로 들자는...), 그러기 위해서 새마을운동 버금가는 운동체를 만들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제를 개편하고 대학 나오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나 어떤 가족형태나 혼인지위로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처럼 너무나 바람직하지만 참으로 요원한 일 말고 쉬운 것부터 해야 할 것이다. 바로 돈 쓰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차별문제를 해결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굳이 '저출산'의 이름을 내걸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것은 이것대로 그대로 진행하되 저출산대책이라고 명명된 대응책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대표 주자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아동수당이 됐든 양육수당이 됐든 당장은 돈이 없으니 셋째아부터 지원한다는 있으나마나한 정책은 이제 그만두고 아이를 낳는 것이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구나,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구나 느끼게 하는 수준의 출산·양육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은 필자의 주장이 참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돈 쓰는 게 제일 쉬운 정책이라니...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그렇지만 이런 말은 하고 싶다. 핵심을 짚은 대응책에 10조를 쓰면 최소한 10조의 효과는 보지만, 애매한 데 1,000억을 쓰면 그 돈은 허공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말... (물론 출산율제고라는 협의의 정책목표를 전제할 때!) 어느 게 더 나은 선택인가? 물론 이 답도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몇 년 동안 저출산 논의 근처를 어른거리던 경험으로 이런 저런 얘기를 해 보았다. 다소 진지하지 못한 어투로 일관했으나 필자는 저출산 논의가 우리 사회에, 또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고마운 손님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 속에 등장한 사람들의 진의가 혹시 왜곡되지 않았는지 우려스러우며 그들의 넓은 이해심을 구하면서 글을 마친다

시대별 출산관련 포스터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의 여성 비정규직

이 주 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부교수

97년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 노동

노동시장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분야이다. 안정된 일자리의 감소와 비정규직화, 조기퇴직과 청년실업의 증가는 이전의 “평생직장”과 그것이 의미하던 “일”의 개념을 타파하는 엄청난 변화였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이후 경제세계화로 인한 불황과 경쟁이 격화되면서 본격화된 노동시장의 전반적 유연화와 맞물려있는 것으로, 이러한 유연화와 비정규직화는 불가피하게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급격한 해체를 불러오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기존 고용모델의 해체가 성별 분업에 기초한 차별적 고용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인해 여성노동은 남성노동에 비해 더욱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여성은 남성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암묵적인 양보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역시 한 부모 가구를 책임지는 가장일 수 있으며, 실직당한 남편을 대신하여 유급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종종 간과된다. 물론 노동시장에서의 형평성과 평등한 기회 자체가 우리가 실현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는 점은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논하는 주류의 논리에 밀려 주목받지 못한 지 오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존의 법령에 명시된 차별금지 규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 차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여성차별효과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바로 이러한 외환위기 직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비정규직 증가를 배경으로 마련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기간제근로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자체에 대해서는 계약 자유에 맡기면서도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제4조 제1항),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제4조 제2항)하고 있다.

두 번째 방식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통해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근로자의 기술, 능력 등이 아닌 고용형태상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처우를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보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과 고용조건 개선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부 업종에서는 무기계약직화를 통한 직군제의 신설로 새로운 차별의 고착화 현상 역시 가져오게 되었다.

첫째, 현재의 비정규직 보호법에는 노동계가 요구한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용 사유에 대한 제한 없이 사용 기간만 제한함으로써 상시 업무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입법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입법화 이후에는 대량의 계약해지와 외주화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고용조정은 여성이 집중된 저기술 저임금 직무를 위주로 진행되었다.

둘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통해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는 불충분한 차별시정기제로 인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고용차별을 생산해내게 되었다.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을 당해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한정시키고 차별시정의 주체에 노동조합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직군화하여 기존 정규직 업무와 분리시키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직군화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다 하더라도 이들은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반 정규직으로 남아 있게 된다. 물론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규제하므로, 이미 정규직화 된 직군에 대한 어떠한 보호나 차별시정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조경배 등이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용역 과제로 실시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무기계약전환자의 임금 총액의 경우 변화가 없는 곳이 많아 여전히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컸으며, 복지제도 적용, 그리고 승진가능성에 있어서도 이들은 정규직보다는 기간제노동자에 더 가까웠다. 전환과정에서 여성의 경우 임금체계변화가 크고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한다는 정규직 비중이 줄어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성별직무격리의 강화 가능성과 사실상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불합리한 임

금체계 도입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물론 성별 직무격리 현상 자체가 고용차별의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성별 직무격리와 같은 복합적인 사회적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양적인 잣대로 쉽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성별 직무격리의 원인을 인적자원의 차이와 같이 노동력의 공급 차원에서 찾는 이론은 주로 베커(Becker)와 같은 미국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여성이나 유색인종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경우 적절한 교육이나 훈련, 그리고 생산성과 같은 인적자원이 부족하거나, 혹은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직무에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별 직무격리 현상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개인적 선호 차원에서 요인도 중요시되었다. 여성은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직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록 현재의 임금이 적더라도 생애 전반에 걸친 소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래서 남성과는 다른 직무를 선택하는 경향을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는 여성이 사회화 과정에서 특정 성향의 업무를 선호하게 될 수 있다는 성별 역할 사회화 이론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선호' 그 자체보다는 그렇게 선호하게 만든 사회적 맥락과 규범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입장도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러한 공급 차원에서의 설명이 수요 차원에서의 설명과 현실에서는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노동자의 기술부족은 바로 이들이 남성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수요 차원에서의 현실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조직 차원에서 작동하는 인사관행이 성 차별적이라면 여성노동자의 차별적 배치는 이들의 생산성에 대한 잘못된 평가절하의 결과일 수

있다. 선발 과정에서의 비용절감을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개별 사용자의 통계적 차별 경향이 조직 내에 규범화된다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차별적 선발, 배치, 승진기준의 결정을 여성노동자의 능력과 선호와 관련된 공급 차원의 요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즉, 성별 격리된 직무가 있는 기업조직에서의 인사관행은 당연히 차별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완벽히 증명하는 것은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이다. 이는 특히 전반적으로 고용평등법제가 제도화되면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차별적 처우(disparate treatment)의 사례가 감소하였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성별 직무격리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그러한 격리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통해 여성에게 불이익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많은 선진국에서 동일임금법이 시행되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임금격차가 유지되는 이유는 여성이 저임금 직무에 격리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실제로, 같은 직무를 하는 남녀에게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보다는 남성과 여성이 업무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 통과 이후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9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에 발표한 이슈분석에서 남재량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정규직의 규모가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소폭 감소(약 26

:: 이슈브리프

만 4천명)하였음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남재량은 같은 자료에 대한 성별 및 세부분류별 분석을 통해 같은 기간동안 여성 한시근로자는 3천 4백명, 그리고 여성 기간제 근로자는 17만 1천여명 증가한 사실 역시 밝히고 있다. 그 기간 동안 남성 한시근로자는 7만 4천명 가량 감소하였으며, 남성 기간제 근로자는 약 9만 5천명 정도 증가하였다. 계약반복갱신자의 경우 남녀 모두 감소하였으나 남성의 감소폭이 현저히 컸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 전체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 전체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더 높다. 김유선은 2009년 5월 한국노총 여성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20대 비정규직의 비율은 남녀 간 차이가 미미하지만, 30대 이후부터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크게 높아져 45~49세 코호트의 경우 여성의 비정규직비율은 72.8%, 남성은 36.8%로, 여성의 그 격차가 40%p 이상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비정규직으로 인한 여성 고용의 불안정화는 경제위기시 여성에게 큰 타격을 미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1998년 47.1%로 급감한 이후 약 10년간 49%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2009년 5월 현재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9%로, 전년 동월 51.1%에 비해 1.2%p 감소하였다. 이는 같은 시기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73.9%에 비해 24% 낮은 수치이다. 이는 물론 OECD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문제의 핵심은 그보다는 '고용의 질'에 있었다. 해고된 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실망실업자로 비경제활동인구화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재고용된 것이다.

고용수준과 더불어, 여성 일자리의 질을 살펴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임금수준이다. 통계청의 지표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임금 대비 여성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01년 65.1%에서 2007년 66.4%로 약간 변화하였으나, 이 역시 66%에서 답보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평균이 80%이상인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위에서 언급한 남재량의 연구는 2009년 정규직 임금상승률이 3%였는데 반해 비정규직 임금상승률은 오히려 -3.1%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이 남성 정규직의 36~38%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임금격차가 곧바로 여성의 저임금 문제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김유선의 같은 연구에 따르면, 2008년 8월 현재 시간당 3,770원에 불과한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인구는 임금근로자 1,610만명중 175만명(10.8%)이지만, 이들 중 남성은 64만명(6.8%), 여성은 111만명(16.5%)로, 여성 비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 중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평균임금을 받는 사람은 4명중 1명꼴로 존재하며, 특히 5,60대 고령층에서는 이 비율이 과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2006년도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9차 자료를 통해 성별, 고용형태별 4대 보험 가입률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남녀 정규 및 비정규직 중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이는 것은 가장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비정규직이다. 남성 정규직이 66%의 가입률을 보이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회보험 가입률이 모두 70%를 상회하고 있는 데 반해 여성 비정규직은 모든 보험에서 가

입률이 1/3에 못 미쳐 이들 중 대다수가 보험의 혜택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 비정규직을 위한 대안

낮은 임금을 받으며 해고 혹은 상시적인 계약해지의 위협에 시달리는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존재는 그 자체로 시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교섭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다수 남성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조건 역시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여성 비정규직의 고용조건과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첫째, 현재 여성 비정규직의 1/4 정도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을 거의 동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성 비정규직은 단체교섭을 통해 보호받거나 임금인상의 기회를 가지기 매우 어려운 노동시장집단인 만큼, 법 제도를 통한 강력한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이 될 것이다. 또한 정규직 위주의 사회보험제도에서 벗어나 특수고용직과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 그리고 더 나아가 미취업자에게까지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런 맥락에서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은 중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4년으로의 사용기한 연장은 모든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화의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으로 핵심적인 비정규 노동자집단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비정규직화로 인한 저임금과 사회권 부재로 인해 주로 여성 노동자가 피해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법의 사용기한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현재 여성부와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 제도의 상당수가 오히려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여성의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반면,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 이제 3년간 시행중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는 여성 고용률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또한 그 대상 기준이 동종 산업 평균 60%미달기업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에, 더구나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집중된 직무는 점차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구분되어 차별의 시정조치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미진한 여성의 사회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 제도가 점차 진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기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 지원사업 효과분석



민 무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조사의 배경

여성부는 2003년도에 처음 전국의 5개 대학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였고 이후 3년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2006년도 부터는 12개 대학에 지원을 하였으며, 2009년 현재는 전국에 20개 대학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대생들이 젠더의식을 갖추고 저학년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자신의 경력설계를 준비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직업세계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대학내 취업지원센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대생들에게 특화된 진로개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에 본 글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운영취지가 과연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여대생들과 이용 경험이 없는 여대생들의 진로개발 준비도에 대한 비교 조사를 통하여 진단하고자 기획되었다.

2. 조사방법과 조사 항목

본 조사의 대상이 된 대학은 2년 이상 여성부 지원을 받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13개 대학으로 수도권 3개 대학, 충청 및 강원 2개 대학, 경상권 5개 대학, 전라권 3개 대학이다. 조사대상은 3-4학년으로서 개별 대학당 40명을 센터 이용경험이 2년 이상 있는 집단과 이용경험이 없는 두 집단(각각 20명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2009년 5월~6월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종 조사결과 분석대상이 된 유효 샘플수는 511명이었으며, 이 중 3학년은 40.1%, 4학년은 59.9%로 구성되었고 센터 이용 경

험 유무 학생의 비율도 각기 50.3%와 49.7%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임언 외(2004)에서 개발한 진로개발준비도 검사로서 원래 검사의 하위 영역은 6개 영역이나 이중 자기이해(자신의 흥미, 적성 및 가치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직업에 대한 지식,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 진로결정 및 준비의 과정에서 관계활용 자신감의 5가지 영역만을 활용하였고 문항수를 축소하여 조사하였다. 검사의 척도는 5점 만점으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된다.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이외에 대학의 취업 지원센터 이용경험도 함께 조사하여 비교하였으며, 여대생특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원하는 내용도 조사하였다.

3. 조사결과

가. 진로개발 준비도

조사대상 여학생들의 진로개발 준비도에 대하여 '자기이해', '직업세계이해', '진로확신도', '의사결정자신감', '관계활용능력'의 다섯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이해' 영역의 각 문항에 대하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이용경험이 있는 여대생과 이용경험이 없는 여대생들간에는 뚜렷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안다' 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이 센터 이용경험 학생의 경우는 5.5%에 그쳤으나 이용경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는 그 두 배에 달하는 10.2%를 나타내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질문인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안다' 라는 항목에 대한 부정적 대답은 각기 4.7%와 15%의 큰 차이를 보이는 등 4가지 항목 모두에 대하여 센터 이용경험 유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자기이해 집단간 차이

단위: %(명)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통계량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안다	있음	0.4(1)	5.1(13)	17.2(44)	55.1(141)	22.3(57)	100.0(256)	$\chi^2=11.483$ df=4 p=.022
	없음	2.0(5)	10.2(26)	22.0(56)	48.8(124)	16.9(43)	100.0(254)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있음	0.4(1)	4.3(11)	30.7(78)	53.1(135)	11.4(29)	100.0(254)	$\chi^2=12.044$ df=4 p=.017
	없음	0.8(2)	10.3(26)	37.5(95)	42.7(108)	8.7(22)	100.0(253)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안다	있음	0(0)	4.7(12)	32.0(82)	50.4(129)	12.9(33)	100.0(256)	$\chi^2=19.901$ df=4 p=.001
	없음	1.2(3)	13.8(35)	36.0(91)	39.9(101)	9.1(23)	100.0(253)	
나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	있음	0(0)	2.0(5)	20.4(52)	58.4(149)	19.2(49)	100.0(255)	$\chi^2=19.882$ df=4 p=.001
	없음	1.2(3)	8.3(21)	27.7(70)	46.2(117)	16.6(42)	100.0(253)	

이슈브리프

두 번째 영역인 '직업세계이해' 영역은 '자기에 해' 영역보다는 여학생들의 자신감이 낮게 나타나는데, 4가지 질문 항목 모두에서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나는 내가 관심있는 직업에서 하는 일과 필요한 능력에 대하여 안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센터 이용경험이 있는 여학생은 6.7%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이용경험이 없는 여학생은 11%가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갈수록 자신감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

전히 두 집단간의 격차는 유의미하다. '나는 관심있는 직업의 임금수준과 근무환경에 대하여 안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센터 이용 경험 학생은 11.7%만이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한 반면, 이용경험이 없는 학생은 무려 1/4을 넘는 25.6%가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많은 학생이 자신의 장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파악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 직업세계이해 집단간 차이

단위: %(명)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통계량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서 하는 일과 필요한 능력에 대해 안다	있음	0.4(1)	6.3(16)	20.7(53)	54.7(140)	18.0(46)	100.0(256)	$\chi^2=17.986$ df=4 p=.001
	없음	0.8(2)	10.2(26)	32.3(82)	47.6(121)	9.1(23)	100.0(254)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안다	있음	1.2(3)	8.7(22)	35.7(90)	44.8(113)	9.5(24)	100.0(252)	$\chi^2=14.147$ df=4 p=.007
	없음	1.6(4)	18.1(46)	39.4(100)	32.3(82)	8.7(22)	100.0(254)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있음	0(0)	7.1(18)	25.1(64)	49.0(125)	18.8(48)	100.0(255)	$\chi^2=17.111$ df=4 p=.002
	없음	2.0(5)	12.7(32)	32.5(82)	40.5(102)	12.3(31)	100.0(252)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임금수준과 근무환경에 대해 안다	있음	1.2(3)	10.5(27)	33.2(85)	45.3(116)	9.8(25)	100.0(256)	$\chi^2=36.034$ df=4 p=.000
	없음	5.9(15)	19.7(50)	43.3(110)	26.8(68)	4.3(11)	100.0(254)	

세 번째 영역인 '진로확신도'는 앞의 자기이해나 직업이해 부분보다 더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였거나 결정한 진로에 대한 만족도, 나아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여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센터 이용경험이 있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도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의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다른 문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3〉 진로확신도 집단간 차이

단위: %(명)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통계량
나는 나의 진로를 결정했다	있음	3.2(8)	12.3(31)	29.2(74)	36.8(93)	18.6(47)	100.0(253)	$\chi^2=14.687$ df=4 p=.005
	없음	4.0(10)	24.7(62)	27.5(69)	27.5(69)	16.3(41)	100.0(251)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만족한다	있음	0.4(1)	8.3(21)	32.3(82)	42.1(107)	16.9(43)	100.0(254)	$\chi^2=12.789$ df=4 p=.012
	없음	0.4(1)	16.6(42)	37.5(95)	33.6(85)	11.9(30)	100.0(253)	
나는 타인들에게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있음	0.4(1)	7.4(19)	22.3(57)	52.0(133)	18.0(46)	100.0(256)	$\chi^2=20.420$ df=4 p=.000
	없음	1.6(4)	16.6(42)	29.2(74)	36.4(92)	16.2(41)	100.0(253)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있음	1.2(3)	14.9(38)	35.3(90)	36.9(94)	11.8(30)	100.0(255)	$\chi^2=21.222$ df=4 p=.000
	없음	2.0(5)	26.1(66)	37.9(96)	30.4(77)	3.6(9)	100.0(253)	

네번째 영역인 의사결정자신감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회피하거나 후회하는 경우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집단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가운데 '나는 누군가가 대신 진로를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영역에 대한 부분에서만 두 집단 간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표 4〉 의사결정자신감 집단간 차이

단위: %(명)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통계량
나는 진로에 관한 의사결정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있음	14.2(36)	15.0(38)	424.4(62)	3.3(110)	3.1(8)	100.0(254)	$\chi^2=.2544$ df=4 p=.637
	없음	12.0(30)	38.6(97)	28.3(71)	17.9(45)	3.2(8)	100.0(251)	
나는 나의 진로에 관해 결정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있음	12.5(32)	49.2(126)	124.2(62)	2.9(33)	1.2(3)	100.0(256)	$\chi^2=6.588$ df=4 p=.159
	없음	12.6(32)	38.6(98)	31.5(80)	15.7(40)	1.6(4)	100.0(254)	
나는 결과가 두려워서 진로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있음	12.5(32)	34.5(88)	31.4(80)	17.6(45)	3.9(10)	100.0(255)	$\chi^2=3.606$ df=4 p=.462
	없음	11.1(28)	30.6(77)	29.8(75)	24.2(61)	4.4(11)	100.0(252)	
나는 누군가가 대신 진로를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있음	37.3(95)	34.9(89)	16.5(42)	9.4(24)	2.0(5)	100.0(255)	$\chi^2=12.368$ df=4 p=.015
	없음	33.6(85)	24.9(63)	27.3(69)	11.5(29)	2.8(7)	100.0(253)	

마지막으로 '관계활용능력'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모든 문항에서 두 집단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문항 중에는 '나는 채용과 관련된 의문이 있을 때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다'는 문항과 '나는 관심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대학의 취업관련기관에 방문하여 알아볼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한 두 집단간의 자신감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5〉 관계활용능력 집단간 차이

단위: %(명)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통계량
나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있음	0.4(1)	5.1(13)	25.5(65)	49.0(125)	20.0(51)	100.0(255)	$x^2=24.726$ df=4 p=.000
	없음	1.6(4)	10.2(26)	39.8(101)	37.4(95)	11.0(28)	100.0(254)	
나는 관심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대학의 취업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알아 볼 수 있다	있음	0.8(2)	9.4(24)	30.2(77)	45.1(115)	14.5(37)	100.0(255)	$x^2=46.856$ df=4 p=.000
	없음	3.1(8)	23.2(59)	40.2(102)	29.9(76)	3.5(9)	100.0(254)	
나는 채용과 관련된 의문이 있을 때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다.	있음	1.6(4)	14.1(36)	31.6(81)	35.9(92)	16.8(43)	100.0(256)	$x^2=28.251$ df=4 p=.000
	없음	4.0(10)	28.9(73)	33.6(85)	25.7(65)	7.9(20)	100.0(253)	
나는 진로에 관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있음	0.8(2)	4.7(12)	31.3(80)	48.0(123)	15.2(39)	100.0(256)	$x^2=32.313$ df=4 p=.000
	없음	0.8(2)	15.5(39)	40.5(102)	37.7(95)	5.6(14)	100.0(252)	

다음 〈표 6〉은 진로개발 준비도에 대한 각 영역의 점수와 총점에 대하여 두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진로개발 준비도 총점에서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참여 경험 여학생들은 73.62로, 참여 경험이 없는 집단은 67.58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나아가 다섯 가지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즉,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여학생에 비하여 모든 영역에서 1~2점 차이로 높은 점

수를 보였다. 가장 점수 차가 큰 것은 관계활용 효능감 영역부분으로 이용경험이 있는 여학생 집단은 14.71점인데 비하여 참여경험이 없는 여학생 집단은 12.90점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커리어 개발센터 참여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이 그동안 받은 각종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진로나 취업을 위하여 자신이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나 그들을 동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6〉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이용 경험별 진로개발 준비도 차이

단위: %(명)

	자기이해	직업의식	진로결정 확신도	의사결정 자신감	관계활용 효능감	준비도 총점
여거 이용 경험 있음	15.32(253)	14.66(251)	14.44(250)	14.40(252)	14.71(254)	73.62(240)
여거 이용 경험 없음	14.31(251)	13.33(252)	13.23(248)	13.78(248)	12.90(251)	67.58(234)
통계량	F=21.065 df=1 p=.000	F=30.964 df=1 p=.000	F=19.329 df=1 p=.000	F=5.045 df=1 p=.025	F=58.163 df=1 p=.000	F=35.844 df=1 p=.000

*주1) 진로개발준비도 검사는 영역별(5가지)로 20점이 만점이며, 총점은 100점이 만점임.

*주2) 의사결정 자신감에 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5점,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처리하였음.

다음으로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진로개발 준비도를 취업지원부서 이용 경험 학생들과 상호 교차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음 <표 7>에 나타나듯이 양기

관 모두를 이용한 집단, 두 기관중 어느 하나만 이용한 집단, 그리고 양 기관 모두를 이용하지 않은 집단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7>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별 진로개발 준비도 차이

단위: %(명)

	자기이해	직업의식	진로결정 확신도	의사결정 자신감	관계활용 효능감	준비도 총점
① 여커_이용 취업_이용	15.41 (163)	14.77 (160)	14.54 (162)	14.32 (162)	14.89 (164)	74.00 (153)
② 여커_이용 취업_비이용	15.17 (90)	14.47 (91)	14.23 (88)	14.53 (90)	14.38 (90)	72.94 (87)
③ 여커_비이용 취업_이용	14.20 (50)	13.64 (50)	12.82 (51)	13.17 (51)	12.68 (51)	66.08 (45)
④ 여커_비이용 취업_비이용	14.33 (201)	13.25 (202)	13.34 (197)	13.93 (197)	12.96 (200)	67.93 (189)
통계량	F=7.213 df=3 p=.000	F=10.829 df=3 p=.000	F=7.032 df=3 p=.000	F=2.600 df=3 p=.052	F=20.251 df=3 p=.000	F=12.453 df=3 p=.000

* 주 : 여커 이용=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이용 경험 집단
 여커 비이용=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이용 경험 없는 집단
 취업 이용=취업지원센터 이용 경험 집단
 취업 비이용=취업지원센터 이용 경험 없는 집단

그 결과 각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양 센터를 이용한 첫 번째 집단의 진로개발 준비도 점수가 7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집단의 경우 학교내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자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집단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만을 이용한 집단으로서 두 번째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세 번째, 네 번째 집단인데 두 집단의 준비도 총점 점수가 각각 66.08과 67.93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 두 집단의 특성차이는 취업지원부서 이용 경험 유무에 있는데 그러한 경험의 차이가 진로개발

총점차이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업지원부서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대규모 강의나 프로그램 위주로 이루어지고 개인별로 제공 되는 것이 적어 학생들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4. 결론

본 조사는 대학내 다른 취업지원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운영이 필요한 것인지, 또 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비록 본 조사가 표본

∴ 이슈브리프

추출 등 조사에 제한점은 있으나 조사 결과,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의 운영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의 경우, 이용경험이 없는 여학생들에 비하여 대학내 여러 가지 취업정보나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자신에 대한 이해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확신, 관계활용 능력 등 진로개발 준비도의 모든 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지원센터 이용자가 학생들의 진로개발 준비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볼 때 이

러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본 조사 결과는 그동안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여학생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여학생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의 90%가 훨씬 넘는 여학생들이 대학의 여대생 특화 진로개발 프로그램이나 취업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특히 재학중에 개인별 커리어상담과 관리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다. 나아가 취업을 위한 직무 적응프로그램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에 이러한 요구가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남성들, 그들만의 근로빈곤 문제

노혜진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1. 들어가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곤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지만, 빈곤이라는 테두리 안에 이슈화되었던 구체적인 주제들은 시기에 따라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에 초점을 둔 절대적 빈곤 논의에서 해당 사회 내의 위치성(positioning)을 고려한 상대적 빈곤 논의로 전환된 빈곤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 빈곤 연구에서는 다시금 치솟은 절대적 빈곤문제나 상대적 빈곤문제를 다루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새롭게 등장한 빈곤층에 주목하였다. 즉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근로빈곤, 청년빈곤, 장기빈곤, 여성빈곤 등과 같이 이전에 부각되지 않았던 빈곤층들이 신규 집단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학술적으로 이들은 신빈곤층으로 분류되었다(장세훈, 2005; 김영란, 2006; 노대명, 2006). 그 중에서도 과거에 수급 자격이 없던 근로 가능한 빈곤층에게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탈빈곤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 신빈곤층 중에서도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집단은 근로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의 대두에 대한 논의는 저숙련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문제에 주목하는 신사회 위험(new social risks) 논의에서도 등장하고 있다(Talyor-Gooby, 2004: 2). 이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상태에 머물게 되는 근로빈곤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빈곤담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빈곤의 새로운 유형들, 대상들,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등장하고

이슈브리프

있는 지배적인 개념들은 과연 여성들 대다수를 둘러싼 실제 현실들을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여성들의 시각에서도 보편적이고 적용 가능하며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신사회 위험의 대표적인 문제와 집단으로서 근로빈곤을 논의하는 것은 실제로 사회 내 다수 구성원들에게 해당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신빈곤의 양상과 문제가 근로빈곤층이라는 특정 정체성을 중심으로 재현되는 것과 같이 재현의 정치학, 정체성의 정치학은 필수 불가결하게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Butler, 1990). 왜냐하면 재현이 정치적 주체로서 드러내고자 하는 집단의 삶을 반영하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확장하려는 정치적 과정 안에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드러내려는 집단의 범주에 대하여 이미 정해진 진실만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 그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체성의 정치, 재현의 정치는 배제, 소외, 위계를 동반한다고 할 수 있다. 신빈곤의 대표적 양상으로 재현되고 있는 근로빈곤 문제 역시 정체성의 정치학을 둘러싸고 재현되지 않는 집단의 문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는데, 그러한 문제 중 하나가 여성의 노동과 빈곤을 보다 정확하게 재현하지 못하고 보편적인 코드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근로빈곤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접근이나 개념에 반영되는 현상들은 남성 중심으로 지배되고 운영되고 있는 사회의 논리와 이론,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로서 지목되고 있는 현상 자체가 사회 전반의

문제라기보다는 남성의 조건과 상황을 중심으로 재현되고 있을 수 있다(Smith, 2004).

따라서 빈곤을 둘러싸고 여성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접근을 벗어난 대안적 접근, 즉 여성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¹⁾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의 지배적인 담론으로서 빈곤이 재현되고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 여성주의 관점을 통해 근로빈곤 담론에서 재현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연구의 분석대상, 더 나아가 정책의 개입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들의 문제에 대한 개입 전략에 대해 문제제기하고자 한다.

2.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문제를 바라보기

여성과 남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평등의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존재인가? 이에 대해 린다 니콜슨은 세 가지의 상이한 지향을 중심으로 남녀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관계를 여성의 위치를 정의하였다(Nicholson, 1997). 첫째는 ‘여성과 남성은 근본적으로 같다’는 인식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여성 억압의 깊이를 강조하였다. 둘째, 여성의 삶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 모두를 강조함으로써, 보다 중립적인 언어로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은 여성이 남성과 구별되면서도 독특한 위치에 초점을 두어, 해방적인 비전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여성들의 경험이 독특하고 유일하며 긍정적인 위치

1) 물론 여성주의 입장론이 과도한 자민족 중심주의나 상대주의 등으로 인해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기존에 남성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지식에서 나아가 새로운 지식의 주체를 허용하고 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강한 객관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Harding, 2004). 뿐만 아니라 여성주의 관점을 통해 볼 때 기존의 사회문제는 새롭게 정의되고, 새로운 가치가 부여될 수 있으며, 억압의 교차된 속성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Collins, 2004).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험에서 파생된 여성들의 입장에서 발견되고 관찰된 문제들은 과거의 재현방식과 비교하여 여성의 삶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여기서의 입장, 위치(position)란 역사 안에서 주체의 위치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경험을 내부자의 시선에서 보기 시작하였고, 여성주의 입장론(feminist standpoints)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주의 입장론은 ‘페미니스트 객관성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상황 지워진 지식(situated knowledge)이다’라고 표현하며 기존에 ‘강한 객관성’으로 인정되어 왔던 이론과 지식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장론은 주변인들의 삶으로부터 사고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는데 왜냐하면 경계되고 구획되어진 주변부를 통해 중심부의 실체를 확인하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Haraway, 1988). 즉 여성들의 삶의 지점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여성들의 삶, 남성들의 삶, 그리고 전체 사회 질서에 대해서도 덜 편파적이며 왜곡된 연구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들의 삶과 경험들이 전통적인 철학적 의미에서 지식의 근간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과학적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장소나 행위들인 지식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Harding, 2004).²⁾

이와 같이 입장론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정체성이란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것이므로, 사회적 총체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총체화에 대한 사회이론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이창순, 정진성 편역, 2003).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정체성으로 재현되고 있는 사회문제들은 단일 종류의 특성에만 주목한다는 점에서 단일 원인론적인 한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뚜렷한 정체성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현실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을 내포한다.

콜린스(2004)는 노동이론을 통하여 이러한 명확한 정체성이라는 유사 거대설화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그녀는 기존의 주류 노동이론이 흑인 여성 노동의 경험을 격하시키고, 여성 노동자로서의 흑인 여성(흑인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인종적으로 억압된 노동자로서의 흑인 여성(흑인여성의 무급 노예노동과 착취된 임금노동)에 대한 특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간과했다고 주장한다(Collins, 2004). 이렇게 볼 때 객관적이고도 명확하다고 인식되는 개념 자체가 패러디일 수 있고, 경계조차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식의 생산을 통해 구축되는 의미화란 토대를 다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규제된 반복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주체는 숨겨지고 규칙만이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Butler, 1990). 그렇기 때문에 단일하고 명확한 정체성보다는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거대 설화 안에서 드러나지 않거나 재현되지 않은 문제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근로빈곤에 관한 논문들을 통하여 근로빈곤 담론의 전개 방식과 내용, 그 안에서 재현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분석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기존의 근로빈곤 연구를 중심으로 한 빈곤 담론의 분석이고, 둘째는 여성의 근로와 빈곤에 관한 자료를 살펴봄으로서 여성의 근로빈곤 문제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근로빈곤

2) 이 때 입장론적 이론에서 지식의 주체는 네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다(Harding, 2004: 132-136). 첫째, 어떤 사상이 출발한 삶들은 그 사상의 결과 속에서 항상 현존하기 때문에 지식 주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화될 수 있다. 둘째 지식의 주체가 구체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치 지워져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지식의 대상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유도한다. 셋째, 그 결과로서 근본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지식을 생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 입장론에 있어서 지식의 주체 및 행위자는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모순적이거나 또는 일관적이지 않다. 이것은 페미니스트 지식이 여성들의 삶에서 출발했지만, 수많은 서로 다른 여성들의 삶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 이슈브리프

연구를 통한 빈곤담론의 재해석을 위해 누리미디어(DBpia)를 활용하여 ‘근로빈곤’, ‘노동빈곤’, ‘근로빈민’, ‘노동빈민’ 등의 주제어로 검색되는 논문들을 살펴보았다.³⁾ 검색 결과 총 42개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연구의 내용이 근로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정책의 운영방식이나 외국의 제도 소개에 치우쳐 근로빈곤 문제가 재현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상황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 12개의 논문을 제외시킨 후, 최종적으로 30개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근로빈곤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빈곤 연구를 토대로 빈곤 담론이 재현되고 있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 가지의 접근을 활용하였다. 우선 기존 연구에서 경제, 노동시장,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근로빈곤 문제가 대두되게 된 배경이라고 제시되고 있는 상황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둘째,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빈곤과 근로가 개념 정의되는 방식을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체와 문제, 그렇지 않은 주체들을 살펴보았다. 셋째, 측정과 분석 방법에 있어 기존 연구에서 근로와 빈곤이 각각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이 과정에서 배제되는 대상이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근로빈곤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 기존 연구에서의 방법론 등을 검토하였다. 각각의 접근방법에 따라 분석할 때 근로빈곤의 문제를 여성의 입장에서 새롭게 고찰하기 위하여 여성의 근로에 관한 각종 지표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노동을 둘러싼 여성들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고찰하고 분석하

고자 하였다.

3. 대표 선수를 기준으로 한 근로빈곤

근로빈곤에 관한 논의가 서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제기되었던 것에 비하여(Klein and Rones, 1989), 국내에서 근로빈곤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위기를 경험한 시점에서 4년 정도 경과한 2002년부터였다.⁴⁾ 빈곤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논의의 선상에서 주변부에 머물던 대상이 외환위기라는 거대 사건을 경험하고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목받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근로빈곤층이 빈곤 논의의 중심부로 이동하면서 구획되고 경계되어진 주변부는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 즉 이러한 주변부를 통해 중심에 위치한 근로빈곤층의 재현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그것이 재현하지 못하고, 배제시키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 것이다.

1) 왜 갑자기 근로빈곤인가? 누구를 재현하고자 함인가?

경제 위기 이후 갑자기 등장하게 된 근로빈곤 논의를 고찰하기 위하여 근로빈곤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장 배경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관련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근로빈곤층 등장의 배경은 크게 경제, 노동시장,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

3)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SI KISS) 등은 논문검색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는 검색사이트 중 하나이며,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류의 빈곤담론 해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보고서나 단행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검색의 시점은 6월이다.

4)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30개의 논문은 2002년 2편, 2003년 4편, 2005년 7편, 2006년 3편, 2007년 6편, 2008년 6편, 2009년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 확산,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유동성 증가와 그로 인한 노동자의 지위 약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경제위기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 한국의 고유한 상황에 관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는 국가 개입의 실패를 주장하면서 또 다시 시장에서의 완전한 경쟁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빈민은 최초의 빈곤정책이 이루어졌던 백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또 다시 근로 불가능한 가치 있는 빈민과,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무가치한 빈민으로 구분되기에 이르렀다(장세훈, 2005; 심상용, 2006).⁵⁾ 따라서 가치 없는 빈민이 되지 않기 위해 임금 노동시장에서의 근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확산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던 시기에 국가적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된 한국 사회는 국가 개입의 축소 맥락에서 개인 노동의 강조, 급증한 빈민에 대한 개입수준의 확대라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적 복지정책에서 근로를 중심으로 한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⁶⁾ 이와 같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빈민의 대상 자체를 근로 빈민으로 국한시켜 재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둘째, 임금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적 흐름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불안정을 야기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유연한’으로 포장된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모순적 용어인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사회도 마찬

가지로 경제위기로 급증한 ‘실직한 아버지들’이 노동시장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필요로 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불안정한 노동자, 즉 비정규직 문제와 불충분한 임금 수준, 사회보험에서의 사각지대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빈곤층은 분절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양산한 최대의 피해자로 부각되면서 등장하였다(최현수, 2002).

근로빈곤층이 등장하게 된 마지막 배경은 사회복지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것은 앞서 살펴본 임금 노동시장의 특성과도 이어진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노령, 장애 등 노동시장 밖에 존재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의 가입 자체에서 배제된 집단들이 발생하고, 이들이 사회보험의 거대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집단들은 노동시장 밖에서도 온전하게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수급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노동시장 밖에서의 지위로 이어지는 복지제도의 계층화 문제를 야기하였다(노대명, 2005).

그러나 위의 세 가지 거시적 측면 외에 특별히 국내에서 근로빈곤 연구가 2002년을 기점으로 등장한 것은 제도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사회보험 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국가 개입으로서 사회부조의 대표적인 제도였던 생활보호제도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호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5) 신자유주의와 근로빈곤층 등장에 관해 장세훈은 “신자유주의는 빈곤층을 빈곤상황에 더욱 긴박시키고 빈곤층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처럼 빈곤층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빈곤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빈곤층(the working poor)을 확산시키고, 취업과 빈곤탈출간의 긴밀한 연계를 느슨한 연계로 바꿔놓는 신자유주의적 상황은 기존의 빈곤과는 전혀 다른 빈곤양상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빈곤’ 상황의 도래를 촉발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장세훈, 2005: 98).

6) 대표적으로 ‘복지에서 노동으로(welfare to work)’, ‘workfare’, ‘근로지불전력(making work pay)’, ‘근로유인(work incentive)’ 등이 있다.

도 수급 자격이 부여되기 시작한 것이다(박석돈, 2003; 이현주, 2003). 다시 말해 제도적 속성에서 과거에 빈곤으로 범주화되지 않던 집단이 새롭게 빈곤층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근로빈곤층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논의한 근로빈곤층 등장의 배경들이 여성을 포함한 전체 인구집단을 충분히 대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신사회위험, 신빈곤층을 낳은 환경과 배경들이 과연 이전과는 상이한, 정말로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근로빈곤층의 등장 배경과 관련하여 위에서 논의된 배경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았다. 우선 완전경쟁시장에서 노동참여에 대한 강조, 임금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 수급에 대한 비판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배경은 어떠한가? 완전경쟁으로 포장된 신자유주의의 경쟁체제 안에서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들은 불완전하고 불리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이것이 근로빈곤층을 양산했다고 기존 연구에서는 주장한다. 즉 조건의 평등이 온전하게 추구되지 않은 채 강조되는 기회의 평등은 오히려 위협할 수 있음을 -또 다른 형태의 빈곤층을 양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굳이 신자유주의의 체제가 아니었어도, 노동시장 내 성차별 등으로 인하여 여성들에게 완전 경쟁시장이란 처음부터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묵인하고 부인하는 논의이다. 즉 '합리적인' 개인들이 노동력을 사고파는 노동시장에는 성별을 이유로 진입이나 이동 등이 가로막히는 '합리적이지 않은' 기제가 여성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김현미, 2000). 임금노동시장에서 규제가 줄어들고 보호받는 노동

의 정도가 감소하는 거대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흐름이 여성들의 입장에서 과연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빈곤층'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임금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수동적인' 복지 수급자에 대한 이미지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어떠한가? 기존 연구에서는 세계적 경쟁이 강조되면서 빈곤층들이 국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소비하게끔 주도하는 '복지병'을 앓고 있는 집단으로 인식되는 맥락에서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전환'이 강조되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임신과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가족 내 다른 구성원들의 돌봄으로 인하여 전생애주기 중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정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성을 동일하게 '근로 능력이 있음'의 범주에 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드러낸다. 그로 인하여 돌봄에 대한 가치가 온전하게 인정되지 않을 때 근로 능력이 있는 여성은 동일하게 '수동적인 빈곤층'에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대두된 두 번째 측면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저임금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 노동자의 증대, 노동시장의 유연화 증가라는 배경 역시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시장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은 굳이 경제위기 시점이 아니어도 언제나 불안정 노동자였고, 비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통계자료가 구비된 시점부터 취업 중인 여성의 절반 정도는 무급가족종사자나 임시일용직의 불안정 노동자였다. 상용직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라는 통계 결과를 고려해볼 때 이를

종합하면, 취업 중인 여성의 60% 이상은 늘 임금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표 2>를 살펴보면, 전체 여성 취업자의 20% 정도가 가족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급여 없이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임금도 없고, 사회보험에서의 보장도 전혀 제공되지 않는 여성 노동의 역사가 존재했다. 저임금, 사회보장에서의 사각지대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여성의 가족무급노동은 명백히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족제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재현조차 되지 않고 '생략'되고 있는 실정이다.⁷⁾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여성들과 여성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즉 주관적, 사적, 개인적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들이 사실은 사회문제, 계급문제가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섹슈얼리티란 개인적, 주관적 표현이 아니라 폭력을 관철하는 사회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급가족종사의 문제도 개인적, 가족적 문제가 아니라 착취를 관철시키는 사회제도인 것이다(Wittig, 200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근로빈곤층을 양산했다고 지적되는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된 문제의 초점은 오히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가 아니라, 여성들에

<표 1> 종사상의 지위별 여성 취업자 분포

연 도	계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불안정 노동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1980	5,222 (100.0)	93 (1.8)	1,125 (21.5)	1,955 (37.4)	1,615 (30.9)	434 (8.3)		2,389 (45.7)
1985	5,833 (100.0)	132 (2.3)	1,108 (19.0)	1,784 (30.6)	2,171 (37.2)	638 (10.9)		2,422 (41.5)
1990	7,376 (100.0)	199 (2.7)	1,183 (16.0)	1,804 (24.5)	1,577 (21.4)	1,659 (22.5)	954 (12.9)	4,417 (59.9)
1995	8,267 (100.0)	276 (3.3)	1,324 (16.0)	1,743 (21.1)	2,107 (25.5)	2,003 (24.2)	814 (9.8)	4,560 (55.1)
2000	8,769 (100.0)	263 (3.0)	1,421 (16.2)	1,688 (19.2)	1,679 (19.1)	2,496 (28.5)	1,222 (13.9)	5,406 (61.6)
2005	9,526 (100.0)	336 (3.5)	1,470 (15.4)	1,329 (14.8)	2,439 (25.6)	2,874 (30.2)	1,079 (11.3)	5,282 (56.3)
2008	9,874 (100.0)	347 (3.5)	1,428 (14.5)	1,230 (12.5)	2,954 (29.9)	2,935 (29.7)	979 (9.9)	5,144 (52.4)

* 불안정노동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7) 콜린스는 흑인 여성에 대한 역사적인 억압의 형태로 두 가지 패턴을 언급하였다. 첫째는 생략으로서 서구 백인 여성들은 예를 들면 낸시 초도로우의 성역할의 사회화나 캐롤 길리건의 여성의 도덕적 발달은 백인, 중간계급의 예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패턴은 다양성의 필요에 의한 킬서비스로서, 많은 백인 페미니스트들이 자신들은 흑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흑인 여성이슈를 피한다거나 인종차별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흑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올 뿐, 자신들의 작업을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Collins, 2003).

계 노동시장이 불안정하지 않은 시기가 과연 존재했는가에 대한 것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연도	취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취업자 중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비	계	여성	남성	여성비	계	여성	남성
1975	11,691	4,26	17,431	36.4%	2,932	2,042	890	69.6%	25.1%	47.9%	12.0%
1980	13,683	5,222	8,462	38.2%	2,569	1,955	614	76.1%	18.8%	37.4%	7.3%
1985	14,970	5,833	9,137	39.0%	2,187	1,784	402	81.6%	14.6%	30.6%	4.4%
1990	18,085	7,376	10,709	40.8%	2,067	1,804	263	87.3%	11.4%	24.5%	2.5%
1995	20,414	8,267	12,147	40.5%	1,946	1,743	203	89.6%	9.5%	21.1%	1.7%
2000	21,156	8,769	12,387	41.4%	1,931	1,688	243	87.4%	9.1%	19.2%	2.0%
2005	22,856	9,526	13,330	41.7%	1,499	1,329	170	88.7%	6.6%	14.0%	1.3%
2008	23,577	9,874	13,708	41.9%	1,401	1,230	170	87.8%	5.9%	12.5%	1.2%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더불어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반영된 5인 이하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에서의 사각지대 문제가 여성들에게는 굳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기 어렵다. 〈표 3〉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을 때, 즉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이 필요할 때 남성 노동자 5명 중 1명만이 공적 이전소득을 받게 되는, 80%의 사각지대를 논하던 시점에 여성들은 여전히 92%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표 3〉 국민연금 적용범위(coverage) 수준

연도	1988	1990	1995	2000	2005	2007
여성	6.5	6.4	8.5	8.4	14.0	19.2
남성	14.5	15.2	23.6	17.4	35.9	35.0

*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의 복지제도 접근과 보장 수준에서의 문제 역시 여성들에게 새로운 것이 없는 문제이다.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여성을 제외한 다수의 여성들에게

사회보험제도는 결혼제도를 바탕으로 남편의 수급권에 기댄 파생적 수급권으로서 존재해왔고, 이것은 혼인 상태의 종결과 함께 제도 적용의 종결로 이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여성들에게 사회보험

으로 대표되는 복지제도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혼인상태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석재은, 2004). 국민연금 제도에서 여성은 어머니로도 딸로도 조차 재현되지 않고 있음을 살펴볼 때, 딸과 어머니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의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리가레이의 주장은 한국적 상황에서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더 큰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복지제도에의 접근 제약과 그로 인하여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의 어려움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여 복지제도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근로빈곤층과 관련된 논의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에 존재했던 빈곤층에 대한 국가 개입의 대표적 제도인 '생활보호제도'에서는 근로가 가능한 빈곤층일 경우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⁸⁾ 그러나 유례없는 경제 위기로 인하여 실직한 아버지들이 급증하게 되었고, 노동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가 가능한 '실직한 아버지'가 있는 가구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시민의 권리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징화되었다. 이를 통하여 빈곤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던 근로 가능한 남성이 구주가 대거 빈곤층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근로 가능한 빈곤층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근로빈곤층 논의의 시작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실직하게 된 근로 가능한 아버지들을 재현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여성들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수의 여성들은 어느 시기에나 근로빈곤층으로서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경제, 노동시장, 복지제도 등에서의 배경을 중심으로 야기되는 근로빈곤의 문제는, 근로빈곤으로 새롭게 편입된 집단, 즉 근로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했으나 최근 들어 그렇지 않은 집단만을 재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근로빈곤 관련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근로와 빈곤의 개념, 측정, 분석 방법과 결과, 이를 토대로 한 정책 대안과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반쪽짜리 노동

기존 연구에서 근로빈곤층을 개념 정의할 때 우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의 결핍을 의미하는 '빈곤'은 화폐적 측면, 즉 소득에 초점을 맞추어 절대적 빈곤 혹은 상대적 빈곤을 중심으로 정의된다. 절대적 빈곤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인 경우 빈곤 가구로 분류된다. 한편 상대적 빈곤은 해당 사회 안에서의 위치를 반영한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중위소득의 50% 혹은 60% 이하인 경우를 빈곤 가구로 분류한다. 이 때 소득은 시장에서

8) 생활보호법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법적 기준(거택보호)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었다. ①65세 이상의 노쇠자, ②18세 미만의 아동, ③임신부, ④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이들과 50세 이상 부녀자로만 구성된 세대

이슈브리프

벌어들이는 소득과 함께 세금을 공제하고 이전 소득을 합산한 가처분소득으로 측정하며,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가구 내 개별 구성원들의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working poor)를 전제로 하는 협의의 개념부터 근로능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workable poor)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까지 활용되고 있다. 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연구에서는 취업자 혹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 중 빈곤한 상태를 근로빈곤으로 정의하는 반면(김교성·최영, 2006; 김영란, 2006; 심상용, 2006) 후자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뿐만 아니라 근로를 희망하고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여 빈곤한 상태를 근로빈곤으로 정의하고 있다(노대명, 2003; 조우정, 2005; 이병희, 2009).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이나 의지가 있거나 혹은 취업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가 여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우선 화폐 자원을 기준으로 한 빈곤의 여성화는 이미 서구에서 1970년대부터 문제제기 되어왔던 부분이지만,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과 비교할 때 비화폐

적 자원의 결핍도 간과될 수 없는 영역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관계를 고려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결핍이라 할 수 있다.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그 수준과 폭이 좁은 편이고, 비공식적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고용이나 소득 등 공식적 영역에서의 화폐 자본의 획득 및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Erickson, 2004).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을 병행하는 경우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자원의 결핍은 화폐적 자원이라기보다 비화폐적 자원 중 시간 자원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남녀의 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을 합산한 총 노동 시간 차원에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의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다. 특별히 가사노동 측면에서는 남성보다 7배 많은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박탈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그 폭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빈곤문제에 대한 논의는 화폐적 자원에 치우쳐있다. 이것은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고, 그로 인해 여성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개입의 내용과 방향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표 4> 남녀의 시간 사용

여 성			남 성		
임금노동	가사노동	총 노동	임금노동	가사노동	총 노동
8:06	3:29	11:35	8:40	0:32	9:12

* 가사 노동시간은 2004년 기준, 임금 노동시간은 2007년 기준임

한편 근로에 대한 개념 정의는 어떠한가? ‘현재 취업 중인 상태’로서 근로를 정의하는 것이 다분히 협소한 개념 정의라는 비판을 반영하여 근로의 잠재성을 고려한 근로 능력, 근로 의지 차원으로 ‘근로 가능한 상태’를 기반으로 한 정의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노동의 교환가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용가치는 배제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추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가정 내 돌봄 노동에 종사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을 지원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의 노동은 근로빈곤층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의 개념에 포함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근로빈곤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의 개념은 근로의 반쪽 속성만을 반영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표선수를 기준으로 제시한 결과들

마지막으로 근로빈곤층의 측정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소득의 기본단위로서 개인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연구에서는 가구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 등을 분석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최소 단위로서 개인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최소 단위는 가구주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의 분석에 활용되었던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자활실태조사와 같이 저소득층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된 서베이 자료이거나 통계청의 가계조사, 패널자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근로빈곤층의 역동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된 패널조사에는 노동패널이나 복지패널 등이 활용되고 있었다.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빈곤층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 고용 상의 특성이나 소득 분포 등 기술 통계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근로빈곤 여부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측정과 분석 방식은 어떠한가? 우선 가구를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있는 대다수의 연구에서 최소 분석단위로서 가구주를 가구의 대표 선수로 설정하여 가구의 빈곤상태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때의 가구주는 일반적으로 남성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실제로 최근 5년 간의 노동패널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표 5) 참조).

〈표 5〉 노동패널 데이터 가구주 성별 분석

	6차(2003)	7차(2004)	8차(2005)	9차(2006)	10차(2007)
여 성	17.7%	17.9%	19.2%	20.0%	20.4%
남 성	82.3%	82.1%	80.8%	80.0%	79.6%

* 가사 노동시간은 2004년 기준, 임금 노동시간은 2007년 기준임

그렇기 때문에 가구주가 아닌 배우자로서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존재할 때, 그들의 고유한 상황이나 가구 내의 위치성, 빈곤에 이르는 경로 등은 빈

곤 연구에서 전혀 재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상 남성가구주 가구의 근로빈곤

이슈브리프

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들의 특성일 수 있다. 즉 성 중립적인 근로빈곤층에 관한 분석의 과정에서 남성들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분석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자료 중 하나인 『가계조사』를 살펴보더라도, 가계조사는 1인 가구가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농어촌가구, 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겸용주택가구, 영업상 사용인이 2인 이상 동거가구, 비형연 자취가구, 단독가구, 외국인 가구 등을 제외한 도시민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표본의 대표성 측면에서 일정 정도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겸용주택가구에서 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실제적인 주체는 여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계조사는 특정 여성 경제 인구를 제외시킨 조사 자료라고도 할 수 있다. 더불어 근로빈곤층의 역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활용되고 있는 패널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국내에서 최장기간 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노동패널의 경우 패널조사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 위기 이전의 근로빈곤 역동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 문제가 최근의 문제인 것처럼 재현되고 있으며, 이것은 과거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온 여성의 근로에 관한 역사를 드러내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기존연구에서 제시되는 근로빈곤층에 관한 분석 결과들은 근로빈곤층이 경험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과 경력 단절, 사회보험 가입현황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근로 빈곤층과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과 경력단절, 사회보험에서의 배제가 여성들에게 최근 10여 년의 기간에만 경험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사고팔기 시작한 역사 이래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계속적으로 존재했고, 교육수준에 상응하지 못하는 임금 수준이 여성에게는 언제나 존재했던 문제였으며,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이나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 재생산 노동을 이유로 임금노동시장에서의 경력 단절은 많은 여성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들은 30년 전이나 현재나 남성 임금의 50%에서 10% 내외의 임금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근로빈곤층과 비교할 때 근로빈곤층의 문제로서 재현되고 있는 내용들이 근로여성들에게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제가 자본주의와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다고 가정할 때,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배제, 권

<표 6> 월평균 임금 및 임금격차

연 도	여 성	남 성	성별 임금격차	연 도	여 성	남 성	성별 임금격차
1980	96	223	43.0%	1985	202	393	51.4%
1990	466	732	63.7%	1995	790	1,361	58.0%
2000	1,167	1,855	62.9%	2005	1,673	2,455	68.1%
2007	1,839	2,919	63.0%				

*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리의 제한 그리고 차별임금은 노동자들을 분화시켜서 자본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본의 이익과 가정 내 재생산이나 돌봄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남성의 이익을 모두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Hartmann, 1977). 노동시장의 성별 분절은 수많은 여성 근로자들을 근로빈곤층으로 만들었으나, 이것은 명백히 노동시장에서 재현되지 않던, 주변부에 머물던 문제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하여 근로를 하면서도 빈곤한 남성이 증가하자 비로소 노동시장의 근로빈곤 문제가 재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트만은 실업으로 대표되는 경제 위기 상황이 실상은 남성 노동자의 실업 중심의 논의였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의 실업이 위기로 고려된 적이 있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며, 기존의 사회문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상으로 근로빈곤층이 등장하게 된 배경, 근로빈곤층의 개념 정의와 측정 및 분석 방법 등을 토대로 그것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고, 이러한 전과정에서 재현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성들의 일’이라는 역사에서 볼 때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부족하거나,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것 등은 단지 최근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특별히 소득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여성이 가족 내 부수적이면서 2차적인 수입원이라는 인식,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절 및 임금 차별 등의 문제는 과거에나 현재에나 계속적으로 여성의 노동에 상응하는 적절한 임금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가사 노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여성들은 새로운 빈곤층인 근로빈곤층의 개념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는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5. 마무리

‘여성의 실업이 사회적 위기로 고려된 적이 있었는가!’ 라는 하트만의 질문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 위기들이 사실은 부분적인 위기이고, 한 편으로 치우쳐서 재현된 위기일 뿐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하트만의 문제제기는 빈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과거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경제위기’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신빈곤층’이란 누구인가에 대해 다시금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다. 그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형 사회문제’인 신사회위험, 신빈곤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시키고자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연구들을 통해 빈곤 담론에서 빈곤층이 재현되는 과정과 내용을 살펴 보았다. 이 때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경제위기 이후 가장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된 근로빈곤층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은 근로빈곤층의 등장 배경, 개념 정의와 측정 및 분석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근로빈곤층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분석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신자유주의 체제의 확산으로 인하여 노동자가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쟁으로 내몰리는 현실,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유연화, 불안정 노동으로 인한 사회보장에서의 사각지대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근로빈곤층의 개념 정의는 ‘현재 근로 상태’와 ‘근로 가능한 상태’의 범위 안에서 협의와

광의를 논하고 있을 뿐 여전히 임금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에 대한 가치 부여만을 답습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고려한 총 노동, 비화폐적 차원에서 빈곤 등은 재현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측정과 분석 방법을 살펴봤을 때 많은 실증 연구들이 80%를 상회하는 남성으로 구성된 가구주를 단위로 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근로빈곤층에 대한 분석들은 실상 남성 가구주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여성들은 계속적으로 존재해왔다. 그들은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까지 수행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화폐적 빈곤뿐만 아니라 비화폐적 빈곤에도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들의 상황은 빈곤이나 노동시장 문제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사적이나 개인적, 가족적인 문제로 축소되거나 생략

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 위기로 인해 급증하게 된 '실직한 아버지' 를 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로소 '일을 하고 있는데도 빈곤한' 사람들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초반에 불안정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전개되던 논의는 최근 근로빈곤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결과들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재현되지 않고 있던 여성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현되고 있는 문제들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과 같이 남성 노동자와의 교집합이 존재하는 부분에 국한될 뿐이고, 여전히 무급 가족종사 형태의 노동이나 총 노동 시간 등 남성들의 상황이라기보다 여성들의 상황에 치우친 문제들과 재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실정이다. 이것은,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지 8년이 경과한 지금, 과연 근로빈곤층은 누구인가에 대해 질문을 다시 제기하게끔 한다.

참 · 고 · 문 · 헌

- 강병구. 2003. "근로빈곤계층의 직업능력에 따른 탈빈곤 요인분석." 보건복지포럼, 77, pp.26-41.
- 김교성 · 최영. 2006.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2), pp.119-141.
- 김교성. 2007.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추이와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2), pp.143-169.
- 김영란. 2005. "한국의 신빈곤현상과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pp.41-69.
- 김은하. 2008.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특성과 빈곤 지위(성별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0(4), pp.5-29.
- 김종진 · 박자경. 2007. "근로장애인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pp.251-274.
- 노대명. 2003. "근로빈곤계층과 자활지원정책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77, pp.9-25.
- 노대명. 2005. "양극화시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보건복지포럼, pp.91-107.
- 노대명. 2006. '노동과 빈곤'.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올아카데미.
- 류만희. 2005. "근로빈곤층의 자활과 소액창업지원사업."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545-556.
- 민현주. 2008. "여성취업의 두 갈래 길." 경제와 사회, 78, pp.223-255.
- 박능후. 2005. "빈부격차의 완화 및 기초생활보장의 강화." 보건복지포럼, 99, pp.55-57.
- 박상우 · 김성환. 2007. "경제위기 이후 빈곤의 특성과 결정요인." 경제연구, 25(3), pp.177-196.
- 박석돈. 2003.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 복지행정논총, 13(2), 109-129.
- 송호근. 200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36(1), pp.23-50.
- 석재은. 2004. "연금의 성별 격차와 여성의 연금보장 방안." 보건사회연구 24(1), pp.93-129.
- 심상용. 2006.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실증 연구(1982-2004)." 한국사회복지학, 58(4), pp.313-339.
- 유지영 · 정영순. 2007. "미국EITC의 근로유인 및 빈곤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p.337-342.
- 이병희. 2009. "일자리 위기와 근로빈곤." 보건복지포럼, pp.33-38.
- 이병희 · 반정호. 2009.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향." 동향과 전망, 75, pp.215-244.

- 이상은, 2005. "근로능력 빈곤층에 대한 빈곤정책의 유형화."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231-243.
- 이태진, 2003. "근로빈곤계층의 빈곤요인분석." 보건복지포럼, 77, pp.57-71.
- 이현주,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내실화방안." 보건복지포럼, 76, pp.41-50.
- 장세훈, 2005. "현단계 도시빈곤의 지속과 변모." 경제와 사회, 66, pp.95-125.
- 조우정, 2005.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고시연구, 372, pp.414-418.
- 지은정, 2007.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3), pp.147-174.
- 최옥금, 2008. "근로빈곤층의 일과 자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188-192.
- 최옥금, 2008.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직업배열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pp.131-132.
- 최옥금, 2008. "근로빈곤층의 직업력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0(4), pp.55-77.
- 최현수, 2002. "경제위기 이후 도시노동자가구의 빈곤이동성 및 빈곤기간 연구." 보건사회연구, 22(1), pp.37-66.
- 홍경준, 2003. "근로빈곤계층의 사회보장 적용실태와 사각지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77, pp.42-56.
- 홍경준, 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2), pp.119-142.
- Butler, Judith, 1999/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 Collins, Patricia H. 2003. "The Politics of Black Feminist Thought." *The Feminist Standpoint Theory Reader*, 318-333.
- Collins, Patricia H. 2004. "Learning from the Outsider Within: The Sociological Significance of Black Feminist Thought," *The Feminist Standpoint Theory Reader*.
- Harding, Sandra. 2004. "Rethinking Standpoint Epistemology: What is 'Strong Objectivity?'" *The Feminist Standpoint Theory Reader* ch. 8.
- Hartmann, Heidi. 1997.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Towards a More Progressive Union," *Feminist Theory*.
- Klein B. and P. Rones. 1989. "A Profile of the Working Poor." *Monthly Labor Review*, 112 (10): 3-11.
- Nicholson, Linda, ed. 1997. *The Second Wave: A Reader in Feminist Theory*. New York: Routledge
- Smith, Dorothy E. 2004. "Women's Perspective as a Radical Critique of Sociology." *The Feminist Standpoint Theory Reader*.
- Taylor-Gooby, P. 2004. "New risks and social change." in *New Risks, New Welfare*. pp.1-28. Taylor-Gooby(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ttig, Monique. 2003. "One Is Not Born a Woman." *The Feminist Standpoint Theory Reader*, 249-254.

미디어 속의 젠더 코드

- 소녀 이미지의 볼거리화 -

김 수 아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미지로서의 여성 : 몸 이미지의 볼거리화

멀비가 그의 논문(Mulvey, 1975)에서 지적한 바는, 기존 페미니스트 미디어 연구의 틀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에 근간한 페미니스트 미디어 연구는 주로 미디어에 등장하는 “스테레오 타입”에 주목하였다. 즉, 남성이 전문직에 종사한다면 여성은 비전문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그려진다고거나,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미성숙한 여성으로 그려진다는 것, 여성이 사적 영역의 담당자로서 남성의 공적 역할과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스테레오 타입에 집중한 페미니스트 미디어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이미지의 생산에 대한 이해가 단순하여 이와 같은 스테레오 타입적 미디어 재현을 “이미지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여성의 삶에 대해서 현실적인 비전이나 덜 스테레오 타입화된 이미지를 제공하면 미디어 이미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Walters, 1995/1999).

멀비는 이 지점에서 이미지의 생산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생산된 이미지가 어떠한 스테레오 타입 혹은 성차별을 담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이미지의 구성 과정에서는 이미 남성중심적인 “응시”의 성차별적 과정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터스(Walters, 1995/1999)는 이에 대해 여성은 이미지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 구성되며 가부장제 문화에서의 여성의 재현은 사회 속에서 실재하는 여성들과 남성의 욕망을 위해 구성된 이미지로서의 여성(woman as image), 즉 성적인 볼거리로서 여성을 분리하고 있

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적인 불거리로서의 여성은 시선의 권력을 가진 남성에게 의해서 대상화된다. 특히 멀비가 주목한 영화에서는 카메라의 시선의 담지자는 언제나 남성이며, 카메라는 여성의 이미지를 수동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만들고 전시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물신주의적 이미지로 파편화되는 영상 관습이 생겨났다. 머리카락, 가슴, 다리, 입술 등 몸의 일부를 강조하는 카메라는 거세공포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며, 성적이지 않은 부분조차도 성애화할 수도 있고, 혹은 재현된 인물 그 자체가 물신화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미지로서의 여성은 영화와 같은 매체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광고와 같은 소비산업사회의 산물들 역시 효과적으로 여성을 불거리화 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한가지, 한국 사회에서 현재 “이미지로서의 여성”들이 자주, 그리고 많이 등장하는 방송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중음악 프로그램들이다.

몸의 이미지를 불거리화하는 가수들

2000년대 이후 여자 솔로 가수들, 혹은 여자 그룹 가수들은 노래 대신 몸의 이미지를 전시할 것을 요구받기 시작했다. 즉, 실력파, 다시 말해 노래를 잘하는 여가수들과는 다르게 몸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수라는 시장이 생겨난 것이다. 이들은 짧은 옷이나 길게 벌어져 몸매가 많이 드러난 옷을 입고 날씬한 몸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댄스를 구사하여 섹시 여가수라는 타이틀을 얻으면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들이 재현하는 이미지는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남성적 응시의 개념에 충실한 물신주의적 재현으로서, 입술이나 다리 등을 파편화하여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대중음악 프로그램에서의 공연에서는 몸의 곡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춤으로서 표현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춤을 찍는 카메라는 노래하는 모습이 아닌 춤을 추는 여가수의 신체 일부분을 강조하는 등 물신주의적인 응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비록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들의 의상이나 춤의 선정성,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홍보 전략이라는 이유로, 또한 성인인 여성이 주장하는 여성의 성적 해방의 한 단면일 수 있다는 이유로 별 의문없이 받아들여져 온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섹시 여가수”라는 몸의 이미지는 점차로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중가요 시장은 “아이돌” 스타들이 아니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이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다소 정의가 모호한 “아이돌” 가수들은 흔히 “10대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비주얼 중심의 가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통용되는데,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미디어를 장악하기 시작한 아이돌 가수들은 주로 댄스 음악 중심의 그룹 형태로서, 열성적인 팬덤을 거느리고 있으며 따라서 음악 실력 보다는 외모나 이미지 중심인 가수들로 간주된다. 1990년대 시작된 아이돌 그룹은 주로 10대 소녀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어리고 아름다운 외모의 “소년” 그룹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후 “소녀”들 역시 이러한 아이돌 그룹의 대열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초기 아이돌 소녀 그룹들은 기존의 “소녀”를 그려내는 미디어 이미지 관습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었

∴ 이슈브리프

다. 가방을 매거나 머리를 양 갈래로 묶어 춤을 출 때 마다 흔들거리는, 그리고 흔히 “스쿨 룩”이라고 불리는 당대 고등학생들이 입을 만한 의상을 입는 소녀들은 “요정”으로 불리었다. 청초함, 순수함이 10대의 그들을 설명하는 단어였으며 순백색, 꽃, 무지개 등이 그들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거나 소품으로 활용되었다. 즉, 초기의 아이돌 소녀들은 여전히 무성적인 존재였다. “요정”은 성애의 대상이 아니라 마법적인 존재이며 초현실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이들의 물리적인 나이가 “소녀”를 벗어나게 되면 “요정”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이때 보통 미디어는 이들에게 “소녀에서 여자로” 등의 수식어를 붙이면서 소녀의 성(聖)스러움으로부터 선을 긋고자 했었다.

하지만 최근의 소위 “걸 그룹 전성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아이돌 소녀들은 무성적이기 보다는 성애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순진무구한 요정으로서의 성(聖)스러운 소녀들은 때로는 암시적으로, 때로는 노골적으로 성(性)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차용한 소녀들의 이미지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소녀 이미지의 불거리화

이제까지 “소녀” 집단이 미디어에 재현 되는 방식은, “청소년”의 범주에 있는 것이기에 무성적 존재로서의 순수성이 강조되는 방식이 많았다. 또한 “소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학교 안에서 존재했다. 교복을 입고 야간자율학습을 하며, 옆 반의 남학생 혹은 학원의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여학생은 우리나라 방송 드라마의 시작과 함께 재현

되는 가장 고전적인 “소녀”의 이미지였다. “사랑이 꽃피는 교실”, “사춘기”, “학교”, “반올림” 등의 청소년 드라마에서 “소녀”들은 학업 성적과 동아리 활동,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과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면서 사춘기를 지나왔다. 그리하여 무사히 대학이라는 성년의 문을 통과하면 소녀는 어른이 되었음을 인정받아왔다.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다시 말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를 통과하기 위한 여정에서 소녀들은 자기들끼리의 속삭임, 혹은 독백, 일기장, 편지 등과 같은 소녀들만의 연대를 갖는 것으로 표현되어 왔고, 소녀들 간의 비밀, 관계, 연대를 중심으로 한 <여고괴담> 시리즈는 이러한 소녀 이미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꼽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소녀들의 재현 방식이 미디어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주류 미디어에 등장하는 소녀들은 이와는 다소 다른 방향의 이미지로 틀 지워지고 있다. 그리고 “걸(girl) 그룹 전성시대”라고 불리는 최근의 대중 가요 시장이 일차적으로 이와 같은 소녀의 이미지를 전환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텔레비전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점령하는 소녀 아이돌 그룹들-원더걸스, 2NE1, 소녀시대, 포미닛, 카라, 티아라 등-의 구성원들은 최소 1-2명의 미성년자 멤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걸 그룹들이 데뷔할 당시 미성년자였다가 현재는 성년이 된 멤버들도 다수이다. 이들은 일본식 교복(짧은 치마에 상체의 선을 드러내는 블라우스)을 입고 데뷔했거나, 짧은 치마와 여성스러운 프릴 장식이 된 블라우스를 입고 춤을 추면서 등장했다. 처음 데뷔시에는 선배 여 아이돌 가수들의 청초한 이미지를 그

대로 차용하면서도 치마의 길이나 춤 동작 같은 데에서 이전의 무성애적 요정의 이미지보다는 성애적 면을 강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소녀그룹의 성애적 이미지는 성인 섹시 여가수의 경우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이전의 순수하고 청초한 이미지보다는 확실히 달라진 것이었다. 이제까지 소녀는 미성년자여서 직접적인 성애의 이미지가 금지되어 왔지만(김예란, 2004), 새로운 소녀 그룹의 생산자에 의해서 명백하게 의도되었거나 혹은 우연인 것으로 가장된 성애적 이미지들은 발빠르게 요정으로서의 소녀 아이돌 이미지를 대체하였다.

이러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애적 컨셉에 대해서는 미디어들 보다 팬들이 먼저 나서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소녀 그룹들의 새로운 팬 층으로 30대 남성 팬들이 급부상하면서 명백하게 소녀들의 성애적 이미지는 남성의 로리타 콤플렉스(일본식 조어로 로리콘)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남성 팬들이 증가한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삼촌팬’을 자처하는 30대 팬들은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것을 변태적으로 취급한다면서 분노하였다.

따라서 팬들이 앞장서 소녀들의 성애적 이미지에 대해서 우려했고, 이러한 점들이 코디나 분장, 노래 가사 등에 대한 불만과 연계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아직 미성년자들인데 의상이 너무 야하다, 노래 가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팬들로부터 먼저 나왔다. 즉, 새로운 팬 층으로서의 ‘삼촌팬’ 들은 자신이 로리콘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만난 셈이었다. 실제로 남성들의 욕망의 내용이 어떠한 간에, 여전히 미성년자의 육체에 대한 관심은 노골적인 욕망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자기 검열적이거나 과잉 규제적 시

각들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남성팬들은 소녀들을 좋아하는 이유를 건강함, 매력, 여동생같은 귀여움 등에서 찾고자 하며, 이와 유사한 이미지의 국민여동생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국민여동생들이 이전의 소녀 아이돌과 마찬가지로 청초함과 순수함을 무기로 하였다면 - 노래방에서 좋아하는 남자에게 나는 사랑을 아직 모른다는 노래를 부르는 - 새로운 국민여동생들은 짧은 치마를 살랑거리면서 어깨를 흔들고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소녀 그룹 이미지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논의의 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소녀들의 성애적 이미지는, 이제까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담론 속에서 소녀에게 성적 의미를 거세시켰던 과거의 관습들이 깨어지고 있다는 신호인가? 남성들의 욕망이 좀 더 폭넓게 대중문화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인가? 또한, 청초하고 순수한 소녀 이미지는 성애적인 소녀 이미지보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물신주의적 소녀 이미지와 그 함의

철저하게 문화 산업의 코드 하에서 기획된 상품들로서 소녀들은 나란히 열에 맞추어 연습한 동작을 들고 나와 노래한다. “나는 정말 예쁘다”면서 몸의 곡선을 강조하는 웨이브 댄스를 선보이거나 “소원을 말해보라”고 노래하는 소녀들의 다리는 부지런히 나란히 움직여 시각적인 자극을 준다. 다리, 입술 등의 몸의 일부분만을 파편화하여 강조하는 카메라의 전략은 이렇게 소녀들의 이미지를 물신화한다.

하지만, 물신주의의 전략은 단순히 여성의 육체를 파편화하여 성애적으로 이미지화하는 데에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소녀들의 청초한 요정 이미지 역시 그 자체로 물신적이다. 남성의 응시의 대상으로서 여성의 육체는 이상적인 몸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순수하고 보호되어야 할 소녀라는 환상은 여전히 남성적 응시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녀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스스로를 예쁘다, 핫 이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소녀들의 진취적 정신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소녀들은 자기들이 재현하고 있는 성애적 볼거리화 되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기획사 시스템 하에서 아이돌 스타들은 철저하게 어떤 인터뷰를 해야 할 것인지조차 교육받으면서 철저한 상품으로서 존재한다. 즉, 이들이 내보이는 몸의 이미지는 본인 스스로 선택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미지화 하도록 요구받은 판타지인 것이다.

따라서 소녀들이 아무리 당당하게, 혹은 능동적으로 성애적인 이미지를 표출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 소녀들의 주체적인 결정과는 관련없이 이미지화된 것에 불과하다. 단지, 미성년자는 야한 옷을 입거나 성적인 행위에서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보수주의적 관점의 논의가 아니라, 청소년으로서의 성적 자결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은 철저하게 남성적 시선에 종속된 성적 대상으로서의 도구화된 몸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본질적인 면에서 가방을 매고 과장된 춤동작을 보이는 요정같은 청초한 소녀들과 직접적으로 긴 다리를 내보이며 소원을 말해달라는 소녀들

은 남성적 응시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차이는 없다. 다만 전자가 이제까지의 미성년자 보호라는 금기에 의해 선택된 은근하고 간접적인 물신주의적 이미지였다면, 후자는 보다 직접적으로 성인 여성을 대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구성된 이미지이다. 미성년자를 일부만 포함하고 있기에 특별히 미성년자 멤버는 보호해달라는 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속에서, 소녀들은 순수함과 성애적 이미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남성적 시선의 대상으로 내놓아, 고운 목소리로 남성들을 향해 ‘사랑’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녀 이미지의 성애화가 갖는 의미는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인가? 다양한 효과와 문화적 의미를 지니겠지만, 먼저 이들 소녀들은 집단적 환상의 대상이라는 점에서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워커다인(Walkerdine, 1997)은 대중문화 영역에서 성애적인 소녀의 이미지는 집단적 환상과 욕망을 수렴하고 파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한바 있다. 노동자 계급의 소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소녀들에게 신데렐라적 환상을 갖게 된다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우선적으로, 남성적 응시의 차원에서 보자면 현재, 한국의 텔레비전에서 성애화된 소녀들이 이토록 대중음악 프로그램과 광고를 넘나들면서 활약하는 데, 이러한 소녀들의 볼거리화가 당연시되는 현상은 이전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애적 환상에 대한 금기가 어느 정도 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것은, 몸 이미지에 대한 급격한 관심과 맞물려서 더욱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비산업사회에서 더 날씬하거나 더 아름다운 몸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직접적으로 여

성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올바른 몸 사이즈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알려져 하나의 통제적 장치로서 여성들에게 작동하고 있다(이수안, 2008). 이때, 텔레비전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여성들이 올바른 몸 사이즈의 모델이 됨은 당연한 것이며, 특히 최근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소녀 그룹들은 외모 중심으로 선별되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여성들, 그리고 특별히 소녀들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여성 그룹의 춤을 보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욕망을 느낀다는 여성 수용자들의 반응은 그 좋은 예이다. 그리고 이들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특별히 실제 학교를 다니고 교복을 입는 소녀들에게 미친다. 이 소녀들은 “교복”을 광고하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학교 가는 길에 포스터에서 만난 교복을 입은 청순하고 순수한 소녀들은 오후의 음악 방송에서 긴 다리와 엉덩이, 입술을 자랑한다. 이들의 몸은 환상적인 몸매로 추천되고 감상되며, 소녀들에게는 동경이자 따라야 할 롤 모델로서 전시되고 있다.

결어

아이러니 한 것은 이들 소녀들은 소녀들로서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교복을 광고하는 소녀들은 기획사의 주도 하에 너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하지만 실제 학교 생활과 멀리 떨어진 소녀들은 학교를 다니는 소녀들에게 노골적으로 자신이 예쁘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것이 유행이니 나를 따라하라는 메시지들을 가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남은 소녀들은 소녀 그룹의 멤버들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아 그 몸과 그 이미지를 갖기 위해 노력하

면서 이들의 이미지를 내면화 한다. 그 몸과 그 이미지는, 남성적 시선에 여전히 종속된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삶에 대한 고민, 특히 10대 소녀로서의 삶의 고민들이 철저한 기획에 따라 키워져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는 동일한 나이대의 소녀 그룹의 함박 웃음과 늘씬한 다리에 밀려 사라지고 있을 때, 소녀들의 정체성이나 연대감, 주체적인 성찰의 기회는 얼마나 주어질 수 있을 것인가. 미디어 속에서 등장하는 성애화된 소녀들은 환상으로 존재하지만 소녀들의 실제 삶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녀의 환상은 단지 은폐 효과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 텔레비전을 장악하고 있는 ‘소녀’ 이미지가 어떻게 불거리로 구성되는가와 그것이 실제적으로 수용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폭로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단지 이러한 재현되는 이미지의 연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미디어 연구(김예란, 2006; 김훈순·김민정, 2004 등)는 소녀들의 경험이나 말하기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물신주의적으로 대상화된 소녀들로부터 다른 소녀상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했다. 또한 10대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회 단체들 역시 소녀들을 소녀들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소녀들이 직접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남성적 시선에 종속된 ‘소녀’ 되기를 권유하는 문화적 흐름에서 다른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미지로서 존재하는 여성의 약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주어지는 이미지를 거부하고 주체적 행위성을 복원하려는 노력에

:: 이슈브리프

있기 때문이다.

참 · 고 · 문 · 헌

- Mulvey, L(1975).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Screen, 16(3), 6~18.
- Walkerdine, V.(1997). Daddy's Girl: young girls and popular culture. MacMillan Press LTD.
- Walters, D(1995). Material girls : making sense of feminist cultural theor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김현미 역(1999). 『이미지와 현실사이의 여성들』. 서울: 또하나의 문화
- 김예란(2004). 텔레비전과 몸의 정치학 - 소녀 육체의 미디어 표상. 『프로그램/텍스트』, 10호, 33~52.
- 김예란(2006). 소녀성과 육체성의 미디어화. 『미디어, 젠더, 문화』, 58~40
- 김훈순 · 김민정(2006). 팬픽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본 소녀들의 성환타지와 정치적 함의. 『한국언론학보』, 43권 5호, 330~353
- 이수안(2006). 소비문화산업의 몸 이미지와 젠더화된 응시. 『한독사회과학논총』, 18권 2호, 185~208